

국무총리 행정조령



국무총리 지시 제9호 (70-2011) 1977. 7.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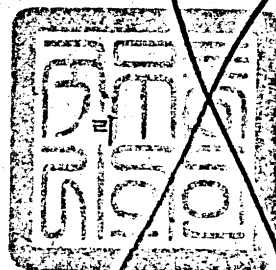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사무기능 검정단체의 설립허가 및 감독체계 일원화 지침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각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운영하고 있는 주산, 타자, 부기등 각종 사무기능 검정단체는, 그 사업목적이 유사하여 허가 주무관청의 한계가 애매하고, 지도 감독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어, 이로 인한 유사단체의 난립과 검정기준의 미통일 등으로 검정상의 폐단과 부조리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설립 허가 및 감독체계를 일원화 하고자, 별첨과 같이 "사무기능 검정단체의 설립허가 및 감독체계 일원화 지침"을 시달하니 각 부처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첨부: 사무기능 검정단체의 설립허가 및 감독체계 일원화 지침

국무총리



수신처: 가 11 - 14, 17 - 37, 39 - 46.
나 1.

사무 기능 검정단체의 설립허가 및 감독 체계 일원화 지침

1. 목 적

정부 각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운영하고 있는 주산, 타자, 부기 및 기타 각종 사무 기능 검정단체의 설립허가 및 감독 체계를 일원화하여 유사단체의 난립과 검정기준의 미통일등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므로서 공정한 검정을 기하게 하려는데 있음.

2. 방 침

가. 설립허가 및 지도 감독의 일원화

주산, 타자, 부기 및 기타 각종 사무 기능 검정단체에 대한 허가 및 지도 감독의 주무관청을 노동청장으로 일원화 한다.

나. 검정기준 및 단체운영 지침의 수립실시

노동청장은 각종 검정종목에 대한 합리적인 검정기준과 단체의 구비요건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단체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다. 검정단체의 난립방지

노동청장은 검정업무의 적정수요를 판단하여 검정단체의 난립을 방지한다.

타. 경과 조치

총무처 장관과 문교부장관은 기존 사무 기능 검정단체에 대한 소관업무 일체를 본 지침 시행과 동시에 소정의 절차를 거친후 노동청장에게 이관토록 하고, 각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본 지침 시행이전에 접수 및 계류중에

있는 사무 기능 검정 단체의 신규 허가신청 서류를
본지침 시행과 동시에 일단 신청인에게 반력하여
노동청장에게 재제출토록 한다. 끝.